

北 잇단 도발에...9·19 군사합의 4년여만에 폐기 수순

北 위반 무인기 침투 등 17건

10월 이후 15건으로 무더기 위반

윤 대통령,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결국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무인기 침투를 포함해 총 17건 있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위반 사례가 15건으로 대다수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킴으로써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4일·18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다.

10월 포격 이전까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 있었고 그 외 간헐적으로 해안 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현 정부 출범 후 남측의 정상적 훈련을 트집 잡아 대놓고 합의를 무시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이라는 강도 높은 도발에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되게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유지해왔다"며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행보를 주시하면서 향후 북이 추가 도발 시 9·19 효력 정지를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냉정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포병 사격과 무인기 도발을 저지르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 3개월여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연합뉴스

여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 공감대

정개특위, 내주 본격 가동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먹구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 내년 4월 총선 관련 룰 세팅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꿈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 해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제 의제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이라며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상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우리당이든 지난번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게 됐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이를 21대 총선에 처음으로 적용했으나 '실패한 실험'으

로 귀결됐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앞다퉀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도로 양당제' 결과만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제 대안 격으로 상정된 법안들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대표적 법안으로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 핵심인데,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들마다 총 의석수는 물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등이 엇갈리는 데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 등 각론을 두고는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 127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전국 비례대표 46석'을 골자로 한 개정안(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막상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국힘 전대 '여론조사 1위' 나경원 등판 여부 변수

각종 여론조사 고르게 상위권

출마면 친윤 김기현 강력 라이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두 달여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로 쏠리고 있다. 나 전 의원의 등판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부상하면서다.

당내에선 나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경우, 현재 잠재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의 측면 지원을 받는 김기현 의원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여의도 정치 무대에 데뷔한 나 전 의원은 18·19·20대 국회의

원을 내리 서울(중구·동작을)에서만 4선 의원이다. 보수진영 내 대표적인 수도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한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21년 6·11 전당대회에 도전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당시 당심(당원투표)에서 우세했지만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밀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경제사 등 두 가지 직을 현재 겸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전 의원이 변수로 떠올랐던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르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룰(규칙)이 '당원투표 100%'로 변경된 데 따라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는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선 4선 의원의 관록으로 쌓인 높은 인지도와 서울에서만 3선에 성공한 이력을 나 전 의원의 정치적 강점으로 꼽는 시각이 있다.

전대 룰이 '당심 100%'로 개정되면서 다수인 영남권 당원 의견이 과다 대표 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을 향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불을 당긴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선 나 의원 스스로도 "수도권에서 정치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제일 오래 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국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수렴 착수

국민의힘이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1

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상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 김상훈·장동혁·정희용·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

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거대야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로(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